

# 현실화 되고 있는 쌀 값 폭락

한농연중양연합회에서는 급격한 양정제도 개편과 불안정한 국내 쌀 산업 수급 상황직시하여 하반기 쌀 대란의 우려를 경고 한바 있다. 9월 현재 많은 지역의 산지 쌀 값이 폭락하고 있으며 단경기 쌀 값이 작년 수확기 쌀 값 보다 더 폭락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고 수확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현재 산지 쌀 값 폭락 실태와 그 원인을 알아보고 문제점과 대책을 짚어보고자 한다.

## 현재 쌀 수급 상황은?

쌀 소비 감소와 수입물량 증가로 재고쌀이 넘쳐나면서 우려됐던 쌀 값 하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북지역이 가장 심하고, 충남·북, 전남 등 서남부 지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재고쌀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만 8,000t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 12만 8,700t에 비해 무려 2, 3배나 늘어난 수치다.

전남지역 농협 창고와 민간 창고에 보관된 재고쌀은 지난 8월말 현재 5만 8,000t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8만 4,000t에 비해 줄었으나 올들어 대북지원용 쌀 4만t이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다소 늘었다. 충남도내 56개 미곡처리장에서도 지난해 18만 2,000여t의 쌀을 매입해 8월말까지 15만 3,000여t을 판매, 84%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2만 8,900여t이 재고로 남아 있다.

충북지역은 8월말 현재 1만 7,600여t의 재고물량이 도내 17개 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쌓여 있다. 이처럼 쌀 재고량이 늘어나는 것은 국내 쌀 생산량과 수입량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에 쌀 소비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에서 생산된 쌀은 3,472만 8,000섬이었지만 소비량은 2,800만섬으로 672만 8,000섬이 남아돈다. 여기에다 143만 5,000섬의 외

국 쌀이 수입돼 결국 816만섬이 공급초과다.

특히 중국산 전쌀이 대량으로 수입돼 김밥집 등에 유통됨에 따라 쌀재고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상 수입허가 대상 품목이 아닌 전쌀은 50% 조정관세를 물고도 국내산 가격의 절반에 불과하다.

1인당 연간 쌀소비량도 2000년 93.6kg에서 지난해 82kg으로 큰 폭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81.1kg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왜 급격한 쌀 가격이 일어나고 있는가?

위에서도 살펴본바와 같이 쌀 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쌀 소비 감소와 수입물량 증가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말 사상최고치(103만여t)를 기록한 쌀 재고를 줄이기 위해 대북지원용 쌀을 10만t에서 40만t으로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월말 쌀 재고가 97만 7,600여t으로 크게 줄지 않을 전망이다.

실제 쌀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훨씬 적은 6~9월 단경기의 경우 예년 같으면 쌀이 비싼 값에 거래됐지만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가을 추수기보다 더 떨어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급격한 양정제도의 개편과 허술한 대응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 2월 농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시국회에서 우리나라 양정제도의 근간이 되었던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

제를 도입하였다. 공공비축제는 시가 수매, 시가 방출 등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지향적인 제도이고 수확기 물량 흡수, 가격지지, 참조가격 기능 등은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 초기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쌀 값을 좌우하는 중간상과 대량 소비자층이 향후 쌀 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매입을 미루고 있고 농협·민간 RPC 들도 수매 가격 형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 추곡수매제에서는 사전에 수매 가격을 정부가 고시하여 가격 형성 참조 역할을 했는데 추곡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격 지지 및 쌀 값 형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농협에서는 올해 낮은 가격으로 수매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산지 쌀 값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쌀 값 폭락 문제점은 무엇인가?

정부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목표가격을

170,070원/80kg으로 정하여 고정직불금(ha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액 중 85%를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한 지원 수준은 기존 논농업직불제와 추곡수매제의 소득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 14만 5천원에 쌀을 수매할 경우 ha당 농가 조수입은 작년 1,022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쌀 값 하락에 따라 목표가격도 3년 단위로 하락하고 고정직불금은 70만원 수준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쌀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할 우려가 있다. 즉, “쌀 값이 아무리 폭락해도 정부에서 쌀소득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우려 할 것이 없다”라는 정부의 논리가 오류임을 증명한다.

또한 수확기 물량흡수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올해 쌀 생산량은 작년 생산 예상량 3,370만섬보다 103만섬이 늘어난 3,473만섬으로 예상되고 있다.



3,473만섬을 기준으로 수확기 시장 출하 물량을 추정하면 농가 소비량과 내년 단경기 출하물량을 제외할 경우 1,920만섬 정도이다. 이 물량에 대해 정부가 400만섬(더욱이 내년부터는 300만석만 수매)을 수매하고 농협 자체매입 645만섬을 비롯해 민간이 1,376만섬을 사들이면 144만섬 정도가 초과 공급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처럼 올 하반기 출하 물량이 그대로 시장에 방치될 경우, 산지 쌀 값 하락과 농가판로 상실 등 국내 쌀 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대책은 없는 것인가?

우선적으로 수확기 물량흡수 대책이 급선무이다. 세계 쌀 수급 여건이 불안하고 북한의 식량위기도 심각한 수준인 만큼 공공비축 목표를 1천만석 수준으로 늘려 5백만석씩 수매하고 지역 간 가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민간업자의 단경기 원료곡 확보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수확기 매입량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곡가조절용 정부미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가 시중 방출량 조절을 통하여 쌀 값을 조절할 수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수확기 수매량 중에서 얼마나 단경기에 방출하고 얼마나 격리를 시키는가에 따라서 시장가격이 등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쌀 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막고 안

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ha당 고정직불금 지원 단가를 1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고정직불금 인상은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탄력적인 생산조정제 등 정책기조 전환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쌀 값 하락이 예상되고 생산자재 등 물가가 높아지는 전망하에서 농가의 추가적인 자구노력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RPC 효율화, 현대화, 규모화 등을 추진하여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RPC가 기존 수매 위주의 매취사업을 탈피하여 파종(중자관리), 수매, 판매까지 모든 부문을 계약 관리하여 농가들에게 부족한 마케팅 능력을 보완하고 고품질화를 유도해한다. 아울러 정부는 RPC가 경영활성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벼 매입 자금 확충 및 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산 전쌀 및 MMA 가공용 쌀의 불법 유통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수입쌀이 국산으로 위장하여 전국 각지에서 유통되고 있고 중국산 전쌀과 김치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이에 백미(소포장) 및 파쇄미 등을 통해 외국쌀을 수입하여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확보해야 한다.